

이공계 위기… 과학기술계에 힘을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



이공계 출신인 박근혜 당선인이 과학기술계에게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과학은 곧 국력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원자도 줄고, 졸업자도 취업이 힘든 '이공계 위기' 상황이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과학 정책을 기대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나사(NASA)를 설립해 미국을 우주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초석을 쌓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20년에는 달 탐사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예산과 연구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편가르지 않는 대통합 보여주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재 지지율은 저조하기만 하다. 이전 역대 대통령이 당선 직후와 정권 초기에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이력을 봐도 특이한 현상이다.

아마도 복지관련 공약 실현 부분의 후퇴,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내각과 청와대 등 주요 인사에서 드러난 편중인사 등이 원인 이 아닐까 한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누차 강조했던 100% 대통

합의 의미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대통합은 세

대·성별·계층·이념 등으로 편가르지 않고 두루

인정하며 배려해야 가능한 일이다.

문화·복지 앞장 새정부 됐으면

▲김정희 지역문화교류재단 운영위원장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 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정부, 문화 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새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지역적 균형은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비틀려 어긋나는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문화의 힘이 제3의 힘과 될 수 있는 정책과 사회기반 조성을 바란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질적인 문화 단체의 지원과 문화전문가 양성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농업·농촌 살리는 국가 정책 기대

▲김근호 농민(고흥군 풍양면)



잦은 대풍과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빛만 쓰여가고 있다. 지난해 잇단 태풍으로 고흥지역을 비롯해 전남 들녘이 쑥대밭이 됐다. 또 태풍에 실린 염분 때문에 바닷가 근처 논에서는 염해 피해까

지 입었다.

이상 기후로 고흥의 대표 농산물 유자도 제대로 여물지 않는 등 농촌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새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공약과 정책은 너무 미흡하다.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기대해 본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력해주길

▲박미영 전 유덕틀게이트 징수원



차가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을 가리지 않고 일년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소에서 일하면서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로 소망한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한 아이들을 보며 집 안에 있을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다. 힘든 여건도 참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로 1년 넘게 일했던 곳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우리 사회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게 새 대통령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가계빚 1천조 시대… 광주 1인당 부채 1천만원

1년새 51만원 늘어… 은행권 가계대출 15조원 눈앞

전남, 1인당 700만원…사업대출 포함땐 더 많을 듯

광주시민 한 명 당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도 15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지역별 가계대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4조95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65억원(5.3%)이 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를 광주지역 주민

등록인구수(146만명)으로 나눠 1인당 부채를 산출하면 약 1024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서었다. 2011년 1인당 부채 973만원에 비해 1년 만에 가계 부담이 51만원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6조9033억원)까지 더할 경우 광주 시민 1인당 부채는 약 473만원이 더 늘어난 1497만여

원으로 1500만원에 육박한다. 세대당(약 95만 세대) 가계 빚도 2300만원을 넘어선다. 특히 지난해 주택대출은 13조8000만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했다.

전남은 지난해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이 13조2559억원으로 주민등록 인구수(약 190만명)로 나누면 도민 한 명 당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700만원 정도가 된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8조1892억원)의 가계대출까지 더할 경우 도민 1인당 부채는 1128만원, 세대당(약 81만 세대) 빚은 26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전국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으로 육박하면서 가계 연간 이자부담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9만5387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가 지난해 평균 114만4644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9조4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47조5000억원이 늘었다.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로, 전국 단위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

았다. 지난해 가구 소득의 증가율(6.1%)이 이자비용 상승률(8.6%)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은 2003~2007년 1.65%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8년 1.92%로 뛰어 오른 뒤 2009년 1.95%, 2010년 2.14%, 2011년 2.29%로 계속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이자비용은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이나 가계 운영 등을 위해 벌린 돈에 대한 비용을 뜻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비롯한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제 가계의 이자비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도, 부산·제주와 해양섬유산업 추진

내년부터 6년간 3644억 투입

전남도가 부산시, 제주도와 손잡고 3600억원대 해양 섬유산업 육성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신산업의 경우,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러 시·도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24일 "해양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부산, 제주와 공동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양 산업용 섬유는 습도, 염분, 파도, 심해압력 등에도 견딜 수 있고 초경량 흐트를 만들거나 그물 등 어구 소재로 활용된다.

전남도는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6년간 총 364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2573억원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부산·제주와 함께 310억원을 마련하고, 761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해당 산업용 섬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전남에는 해양부품 융복합화 기반을, 부산에는 연구·개발센터를, 제주에는 해양순환소재 자원화 기반을 각각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역간 협업계획도 마련했다.

전남은 에코보트 실용화와 경량 선박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부산에서는 어망과 어구 제조, 복합소재 해양 레저기구, 해양구조용 섬유 개발을 맡는다. 제주는 해양자원 순환형 섬 유소재 개발에 주력하는 등 역할 분담도 논의됐다.

전남도는 4월 중 중앙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정운영 부실' 광주시 교부세 8억 삭감

행안부, 광주 5개 구청·전남 11개 시군에 '패널티'

시·북구·광산구 예산집행율 높여 인센티브 받기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한 광주·전남 자치단체 17곳의 온지방교부세를 삐냈다.

재정운영을 잘한 지자체 5곳은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일부 분야에서 재정운영을 잘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선 잘못한 지자체 6곳은 인센티브와 함께 삭감조치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주시와 신안군, 영암군에 대해 올해 지방 교부세 8억 3500만원, 5억7700만원, 2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 동구 2100만원, 서구 9800만원, 남구 2500만원, 북구 6600만원, 광산구 4400만원 등 광주 5개 구청 모두 재정 운영을 잘못한 사실이 적발돼 교부세가 깎였다.

다만, 광주시와 북구는 예산집행율을 제고 분야에서 예산을 잘 운영해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광산구는 예산 효율화 분야에서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전남에서는 목포 400만원, 순천 900만원, 나주 600만원, 화순 1200만원, 해남 800만원, 무안 100만원, 함평 1400만원, 영광 2000만원, 완도 1000만원 등 11개 시·군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또 광주 서구의 경우 ▲서구지역 활센터 자활사업 추진 부적정(7700만원) ▲긴급지원 부적정자에 대한 비용징수 부적정(1900만원) 등이, 남구는 공유재단 무단점유에 따른 관리업무 등 소홀(1900만원), 북구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의 사용(3500만원), 광산구는 긴급지원 부적정자에 대한 비용징수(3100만원)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깎였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신청사 기계 설비 구매 관련 하위 기성검사 및 대가 부당 지급 사유로 5억7300만원이 삭감됐으며, 영암군은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 사유로 2억원이 깎였다. 영광군은 지방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집행을 잘못해 1300만원이 삭감됐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4곳 문화특구 지정 추진

전남도가 국비를 지원받고,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는 문화특구 4곳의 지정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4일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화순 호남설학특구, 강진 다산 및 영랑생 문화특구, 고흥 분청문화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는 지난 1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화순 호남설학특구는 호남을 대표하는 설학자 하백원과 나경적이 태어난 이서 애사장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강진은 다산과 영랑을 기반으로 한 문학관련 문화관광단지를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브랜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흥은 두 원운대 리듬과 문화예술을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광양과 구례 일부 주민들의 회의장 점거 등 반대로 무산된 뒤 다시 열리는 것이다.

/광양 백운산 22번째 국립공원 될까

내일 주민공청회… 타당성·관리계획 등 논의

당시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 임산물 채취 애로 등 피해가 크다며 반발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원화 이후 백운산이 학술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국립공원이 되면 토지 양도나 매각 시 확장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연구결과, 지정 및 관리계획안 발표, 전문가 패널 등의 토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광양과 구례 일부 주민들의 회의장 점거 등 반대로 무산된 뒤 다시 열리는 것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동국대학교 전산원 학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학과	학위	인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00명
멀티미디어학과		00명
경영학과	경영학사	00명
국제경영학과		00명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사	00명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사	00명
연기학과		00명
영화영상제작학과	예술학사	00명
경영학과(아간)	경영학사	00명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외자